



지난 20일 경희의료원 암병동에서 교수의회 제2차 전체 임시대의원회 시작 전 범대위 소속 구성원 단체 대표자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며 교수의회 대표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이날 총동문회 박용화 수석부회장은 “교수의회가 구성원 소통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일갈했다.

대평의 규정안 논란 한 달째 ‘표류’

강석현 기자 nujabes99@khu.ac.kr

‘대학평의원회(대평의) 종장선출규정(선출규정) 논란’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범인 이사회가 제시한 구성원 의견 수렴 기간인 5월 20일을 훌쩍 넘긴 상황 속에서 교수의회와 종장선출 범경희대책위원회(범대위)는 서로 대립되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각각 범인 압박 카드를 꺼냈다. 이에 ‘범인 대구성원’, ‘교수의회 대 범대위’로 격화된 대립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범대위는 이사장 면담을 요청하며 응하지 않을 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로 전환할 것이라고 범인을 압박했다. 범대위는 지난 22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평의 선출규정 논란’과 관련한 토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총장 선출은 오직 범대위에서만 논의되어야 하며, 지난 3월 범인이 제시한 종장후보추천 규정(추천규정) 초안은 폐기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아울러 범대위는 지난 23일 범인에 ‘이사장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고 만약 이사장이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요청서에는 교수의회를 제외한 전 구성원 단체의 서명이 기재됐다.

서울캠퍼스 종학생회 김수혁(자율전공학 2016) 회장은 “범대위 구성원들은 종장 선출을 진행하기 위해서 범인에 소통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수의회가 전혀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다”라며 “많은 학생들이 다른 구성원들과 소통에 임하려 하지 않는 교수의회 측 태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수의회는 범인에 대평의 선출 규정 채택을 종용했다. 교수의회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달 22일 열린 제5차 대평의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채택한 선출규정을 지난 3일 범인 이사회가 수용하지 않은 것에 분노한다”며 “범인이 2019학년도 1학기 중에 종장 선거 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며, 만약 범인에 의해 구성원들과의 약속이 파기될 경우 그 주된 책임은 이사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언언한다”고 밝히며 범인을 압박했다.

교수의회 강재식 의장은 “지난 3일 열린 범인 이사회가 대평의 선출규정을 반려하고 그 책임을 구성원 단체들에게 돌리면서, 교수의

회에서 그동안 일관되게 요구한 이번 학기 중 종장 선거 실시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했다”며 “범인이 지금의 방관적 태도를 바꾸면 문제는 오히려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수의회는 자체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대평의 선출규정의 투표반영 비율을 고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조사 대상 교수 1,321명 중 701명이 응답했으며 이 중 64.9% 가량이 ‘대학평의원회에서 논의하고 확정한 교수 투표반영 비율(75%)을 고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평의 선출규정 논란’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20일 교수의회가 주관한 제2차 전체 임시대의원회가 시작되기 전 총동문회, 경희대학교 노동조합, 민주노총 경희의료원지부, 경희학원 통합노동조합(경희학원노조), 서울캠퍼스 종학생회 등이 모여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언쟁이 다소 격렬해지는 등 혐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 경희학원노조 장백기 위원장은 “범대위에 왜 참여하지 않느냐. 구성원 간 논의를 하자는 것

이냐 말자는 것이냐”고 항의했으며, 총동문회 박용화 수석부회장은 “소통에 문제가 생기면 비공식적으로라도 만나서 입장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수의회 강재식 의장은 “지난 달 19일 대평의에 참여하지 않는 일부 구성원 단체를 정중히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해당 구성원 단체 대표자들은 ‘총장 선출제 논의의 주체는 대평의가 아닌 범대위가 맡아야 한다’며 당일 간담회를 돌연 취소한 바 있다”며 “돌발적 시위를 통해 교수의회에 압박을 가하면서 한편으로 대화를 요구하는 방식은 지극히 모순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속되는 논란 속에서 대학본부는 빠른 시일 내 구성원 간담회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장실 김동준 과장은 “교수의

회와 범대위에서 각각의 의견서를

범인과 대학본부에 보내왔지만 구

성원 합의안은 전달받지 못했다”

며 “우선 소규모라도 참석할 수 있

는 구성원 단체 대표자들과 일정

을 조율해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배리어프리존, 장애학생도 안전하게 축제 즐긴다

한진석 기자 jinseok@khu.ac.kr

【서울】 서울캠퍼스(서울캠) 종 학생회(총학)가 장애 학생의 원활한 축제 관람을 돋기 위해 ‘배리어프리(Barrier-free) 존’을 마련했다. 지난해에도 배리어프리 존이 설치됐지만 올해는 위치와 이용 대상을 보완했다.

배리어프리 존은 장애 학생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관중석과 별도로 설치한 ‘장애 학생 전용 좌석’이다. 총학은 배리어프리 존 설치를 위해 장애 학생지원센터로부터 장애유형과 수요 등 정보를 받고, 장

애 학생에게 사전 신청을 받았다.

장애 학생은 휠체어석과 일반좌석을 선택할 수 있고 동반 1인을 위한 좌석도 함께 제공됐다. 장애 유형에 따른 구분은 없었으며, 사전에 조사된 입장 시간 및 인원에 맞춰 좌석이 조정됐다. 배리어프리 존 운영 전반을 담당한 총학 박하영(정치외교학 2017) 전략실장은 “모든 학우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해 당연히 만들어야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다”며 배리어프리 존 설치 계기를 밝혔다.

직접 확인한 결과 장애 학생이 자리에 앉았을 때 시야를 제한하는

환경은 없었다. 좌석 뒤쪽에는 안전을 위해 펜스가 설치됐다. 배리어프리 존을 이용한 한채정(행정학 2019) 씨는 “청각장애인 특성 상 일반 관중석에 있을 때 공연 내용이 거의 들리지 않았는데 배리어프리 존은 비교적 무대와 가까워 소리를 크게 듣거나 입 모양을 읽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고쳐야 할 점은 있었다. 배리어프리 존이 안내도에 표기되지 않았고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행사 중 시야를 가려 관람에 어려움을 겪은 장애 학생도 있었다. 송채원(행정학 2016) 씨는 “배리어프리 존의 설

치는 환영하지만 지체장애 학생의 눈높이에서는 행사 관람이 제한되는 등 당사자의 관점에서 다시 검토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 역시 관련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장애 학생들의 안내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

총학 박 전략실장은 “사전에 조사한 시간에 맞춰 입장 준비를 했으나 실제 입장 시간과 차이가 생겨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면서 “이번 축제 경험을 토대로 차후 배리어프리 존 운영에 다양한 개선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면안내

총장 선출제 구성원 의견 》4-5면



왼쪽부터 박영국 총장직무대행, 총동문회 권오형 회장, 경희학원 통합노동조합 장백기 위원장, 민주총동문회 김재운 회장

창간기념기획

뉴스레터, 독자적인 정보제공 채널로
발돋움 목표 》7면

시선

사설

당사자만 모르는 타협 방법

또 총장 선출제다. 새 학기가 밝으면서 합의해 둔 큰 틀과 뜻으로 부드럽게 진행되리라 예상했던 총장 선출제 논의가 빠怙대기 시작한지도 세 달째를 향해가고 있다. 지난해 총장 선출제 논의와 차이가 있다면 올해 들어서는 문제가 되는 한 사안을 둘러싸고 입장이 평행선을 그으며 언제 교차할지 그 예상을 세우기 조차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해 논의에 참여했던 대학평의원회나 총장선출 범경희대책위원회(범대위)를 구성하는 구성원 단체의 대표들이 임기를 맞아 대부분 교체되면서 논의에 변곡이 생길 것이라는 예측까지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 변곡의 크기가 이렇게 크고 깊을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구성원 투표 반영비율을 둘러싼 잡음은 구태여 여기에 다시 풀 필요도 없을 정도로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다. 서로가 자신만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태풍의 눈은 교수의회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논란을 만들어 일으켰고, 데워진 바닷물이 태풍을 키우듯 끊임없이 논란의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

교수 투표반영 비율 75%가 논란이 되자 한 때 출구 전략을 마련하며 조금 물러나거나 싶었던 교수의회의 태도는 최근 자체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로 더 단단해져 버렸다. 소속 교수들이 높은 투표반영 비율을 원하니, 교수의회는 그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논의의 여지는 차단당했다. 범대위 구성원들의 항의방문은 서로 언성만 높인, 설마 했던 촌극으로 끝났다. 이성과 논리는 아집과 적의에 버무려진 채 죽었다.

교수의회,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되었던 총동문회가 되었던 그간 총장 선출제에 참여해 온 구성원 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이익집단이다. 이익집단의 장은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하라고 집단의 구성원들이 대표로 선출해 뒀으니 그 근저까지 부정해버릴 순 없다. 다만 이익을 추구하는 와중에 자신들이 타고 있는 더 큰 배의 존재까지 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총장 선출제를 논의함은 오롯이 법인의 권한이었던 총장 선출 과정에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코자 했던 열망이었다. 경희가 70년 간 이야기해 왔던 민주화의 가치이기도 했다. 그 열망이 작은 이익 앞에 교착상태에 빠졌으니 이를 개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지난 5일 발생한 러시아 여객기 추락 사고는 일부 승객의 욕심이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기체 뒤쪽에 탑승했던 41명이 사망한 것은 일부 승객이 수화물을 가지고 탈출하려고 통로를 막은 것이 원인으로 추측되고 있다. 스스로의 목숨도 위태로운 와중에 작은 이해에 집착하다 빛어낸 참사였다.

총장이 공석이라고, 대행체제가 길어진다고 누가 죽지는 않겠지만 구성원들은 언제까지 선장 없는 배에 흔들려야 하나.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대표의 훌륭한 역량이겠지만 보다 큰 그림을 보고 소통하는 것은 더 큰 덕목이다.

이 지루한 논의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사람은 범인도, 대학본부도 아니다. 스스로가 열쇠를 쥐고 있으면서 아무도 내려놓으려 하지 않으면 이 지루한 공방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참여마당

총학생회의 새로운 시도, ‘배리어프리 존’

김민제 (행정학 2018)



이번 축제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시도됐다. 바로 ‘배리어프리 존’의 설치였다. 배리어프리란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인 장애물이나 심리적인 장벽을 없애자는 시책이다. 저상 버스처럼 장애인의 이용에 지장이 되는 장벽을 없앤 사례가 대표적이다.

총학생회(총학)은 축제 무대에 배리어프리존을 설치함으로 장애인들이 물리적 제약에서 벗어나 등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작년 가을 축제 때도 배리어프리 존이 설치됐으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학우들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게다가 흥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각·청각·언어장애 등 다른 유형

만평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이 주의 주제 - 축제 배리어프리 존 설치

배리어를 넘는 배려

한진석 기자

1_jinseok@khu.ac.kr



수어(手語)로 ‘현실’이란 단어는 ‘정말’에 ‘오늘’을 더해 표현한다. 그 손짓을 따라하며 새삼 깨닫는다. 현실이라는 단어로 말을 시작할 때마다 오늘 실제로 겪는 일을 말하고 있었음을. ‘현실적’이라는 말 앞에서 장애 학생들이 처한 현실은 ‘비현실’이 되는 일이 많았다. 현실적인 예산 문제와 다수의 논리로 가려진 변명들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장애 학생들과 함께 학교의 문화를 꾸려가는 학생 사회의 작은 시도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축제 중 운영된 장애 학생들의 관람 좌석, ‘배리어프리(Barrier-free) 존’이 특별히 반가운 이유다. 무대에 보다 가까워진 배리어프리 존에서 장애 학생들의 의견을 물었다. 입 모양을 읽거나 큰 소리를 들어야 하는 청각장애 학생, 가까이에서 보아야 하는 시각장애 학생 등 취재 중에 만난 장애 학생들의 반응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기존 축제에서 배제되었던 모든 유형의 장애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장벽이 낮아진 공간이 생긴 것이다. 학내의 구성원으로서 축제에 어울리고, 안전하게 공연을 즐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

물론 배리어프리라는 수식어가 무색한 부분도

있었다. 자막 해설이 제공되지 않아 여전히 장벽에 가로막힌 청각장애 학생들이 있다. 휠체어에 앉은 학생들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못한 탓에, 보이는 틈을 찾아 바삐 움직이던 바퀴도 잊을 수 없다. 장애 학생 당사자의 관점에서 다시 배리어프리 존의 운영이 검토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럼에도 이번 배리어프리 존의 설치를 환영하는 까닭은 이러한 작은 시도가 더 큰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젠 축제를 넘어 학교 전반의 시설과 장애 학생들의 권리가 고민할 때가 왔다. 장애로 인해 학습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잃는 것은 장애 학생만의 장벽이 아니라 비장애인 학생들의 장벽이기도 하다. 장애라는 특성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한 장벽이 곧 우리 학생 사회의 한계를 보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수많은 특성 중 굳이 ‘장애’라는 분류가 있는 것은 그 장벽을 만든 사회의 문제다. 장애인이 겪는 일상의 장애물을 없애자는 시대적 흐름, ‘배리어프리’로부터 학내 사회도 예외일 순 없다.

배움의 시간이라는 비교적 작은 유타리에서도 ‘배리어프리’ 한 환경을 꿈꿀 수 없다면 우리의 학문과 의식의 성장도 그곳에서 멈출 뿐이다. 일상의 장애물에 모든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지질 필요가 있다. 함께 알아차리는 일에서 모든 변화가 시작된다. 학문과 현실의 소통을 외쳐온 경희의 정신은 장애 학생들의 현실과도 소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배리어를 낮추는 배려를 그 장벽을 만든 우리 사회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함께 고민할 것을 학우들에게 제안한다.

의 장애 학우들은 그 자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그렇기에 이번에 설치된 배리어프리 존은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배리어프리 존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사이의 장벽을 허물었으며,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축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배리어프리 존 설치는 지난 선거 때 총학 ‘경희 대로’의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이때만 해도 공약을 잘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지만 총학은 공약을 잘 지켜주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총학생회가 적극적으로 장애 학생 지원 센터에 연락해 사전신청을 받았던 것이다. 작년에는 학교 차원에서의 흥보뿐만 아니라 사전신청 제도가 없어 축제 당일에 혼란이 있었다. 미연에 혼란을 방지한 총학에 칭찬을 보내주고 싶다.

축제 날이 다가오자 배리어프리 존 담당자는 입장 시간 및 위치에 관한 상세한 공지를 전했다. 배리어프리 존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도 큰 혼선은 없었다. 스텐딩 석 왼쪽, 무대 앞쪽에 마련된 자리에서는 공연을 보기가 한층 편했다. 다만 휠체어 특성 상 시야가 낮아 스

텐딩 석에 가려진 옆쪽은 잘 보이지 않았던 점이 아쉬웠다.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당사자의 관점에서 배리어프리 존을 설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대략적인 배리어프리 존을 설계한 후 당사자의 피드백을 수용해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다.

고려대학교는 시각장애 학생을 위해 저 시력용자 망원경을 준비했고, 대구대학교는 청각장애 학생을 위해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배리어프리 존 설치는 단순한 배려를 넘어 장애 학생들이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다. 장애 학생들도 엄연한 구성원으로 축제를 등등하게 즐길 권리가 있다.

이번 배리어프리 존 설치를 넘어 앞으로도 장애 학생 권리 보장을 위해 작은 것부터 노력해 간다면 더욱 성숙한 대학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더 나아가 앞으로도 배리어프리 존의 설치를 통해 축제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던 장애 학생이 당당하게 축제를 즐기고 비장애인 학생들도 바람직한 장애 인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육과 폭력의 흐릿한 경계 진지한 고민 필요한 때

세시봉

김수혁 (서울뉴스팀장)



정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을 규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부는 민법 915조가 정하는 징계 범위에서 신체적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아동 체벌을 정당화하는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표라고 말했다.

물론 현재도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휘둘러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는 속담이 있듯 폭행과 ‘교육을 위한 체벌’은 다르다는 것이 여전히 한국에서 통용되는 정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6.8%가 자녀 양육을 위해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때문에 정부의 이번 개정 시도는 앞으로 만만치 않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체벌 규제를 반대하는 이들은 부모가 자녀를 체벌 할 수 없으면 원활한 가정교육이 불가능해진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정부 또한 사회 통념을 고려해 적절한 허용 범위를 설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체벌과 폭력의 명확한 경계선을 긋기 어렵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체벌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때다.

체벌을 가하면 즉각적인 행동 변화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고통을 피하기 위해 행동을 바꾸는 경험의 반복이 아동에게 무엇을 남길까.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을 내재화하기에는, 회초리를 보고 고통을 떠올리는 순간은 너무 짧다. 아동이 단지 부모의 권리와 위협에 굴종하게 만들 뿐인 행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채 체벌이 넓는 즉각적인 효과만 봐선 안 된다. 그 실상은 지금 당장 아이가 시끄럽고 산만하게 굴지 못하게 하는 것, 어른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아이가 아이답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것일 뿐인지도 모른다.

아동에 대한 체벌이 논쟁의 여지없이 부모의 재량에 속한다는 관점에는 사실상 아동을 온전한 인간이 아닌 부모의 소유물에 가까운 무언가로 보아 온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반영돼 있다. 아동은 물론 미성숙한 존재지만 미성숙은 보호와 보살핌을 받아야 할 이유지 권리 박탈과 억압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번 시도가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부모의 자녀 체벌을 교육으로 볼지, 폭력으로 볼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쟁과 고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교육 효과를 지난 적당한 체벌은 존재한다고 결론난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최소한 체벌이 폭력인지 교육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고민이 부족할수록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기는 더욱 쉬울 것이다. 그런 고민 없이 어른들의 편의를 위해 저항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폭력과 교육 사이 흐릿한 경계 속에 방치하고 있다면 부끄러운 일임에 분명하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곁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좌측상단 기사제보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인 박영국 | 편집인 조영웅 | 편집장 이우승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자산(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미래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양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교육부 특정감사 수감

연이은 사립대 비리 여파로 보여

안수민 기자 ansu95123@khu.ac.kr

교육부는 지난 13일부터 6일간 우리학 교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특 정감사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2016년 이후 정부에서 지원한 국가연구개발 사업비 집행 전반에 범위를 뒀다. 특히 우리학교는 BK21+사업과 대학특성화(CK)사업 감 사에 초점이 맞춰졌다. 중점사항은 사업비를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다.

교육부 주관 감사는 종합감사, 회계감 사, 특정감사로 구분된다. 이중 우리학교가 받은 특정감사는 제보나 민원 등에 기 반해 실시된다. 교육부 업진섭 반부패청 렵담당관은 “아직까지도 조사를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현장실사가 있을 수 있다”며 “실사 이후에도 파악 및 검토 과정이 있어 최종 결과가 나오려면 2달 정도 소요된 다”고 설명했다.

BK21+사업과 CK사업 모두 올해 지원이 만료되는 사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BK21+사업은 대학원 교육 활성화와 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인문사회분야 석·박사급 인재를 지원한 사업이다. 우리학교는 ‘미래기반 창의인재 양성형’에 선정되어 2013년부터 올해까지 7년 간 총 71억 1,900만 원을 지원받았다.

CK사업은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을 두고 특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우리 학교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매년 17억 원을 지원받았다. ‘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단’이 10억 원, ‘시공간 빅 데이터 융합 전문가 양성 사업단’이 7억 원의 금액을 받아 왔다.

우리학교 감사행정원에 따르면 “교육부 에서 온다면 대부분 ‘실태조사’라는 명목 하에 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처럼 특정 감사는 흔치 않은 일이다”라고 답했다. 최근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는 사립대 부정비리 근절을 위한 것이다. 우리학교 특정감사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난 8일 교육부가 공개한 회계감사 결 과에 따르면, 고려대와 명지대가 교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각종 회계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대는 교직원 들이 유동비나 퇴직선물을 사는 데 교비를 전용하거나, 학생지원비 및 실험·실습비를 부적절하게 쓰는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명지대도 학교법인이 내야 할 범인세 약 8억 원을 교비로 지급했 으며, 교육용 토지를 활용하지 않아 범인에 부과된 재산세 약 15억 원을 교비회계로 집행하는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공립대학은 3년 주기로 정기적인 종 합감사를 받지만 사립대학은 무작위나 필요 한 경우에만 감사를 실시해 비리와 부정을 견제할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종합감사는 재산 운용·관리, 입시, 학사, 인사, 예산, 회계 등 대학 전반에 대한 가장 강도 높은 감사다.



교육부는 최근 우리학교 BK21+, CK 사업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했다.



(사진=이어립 기자)



(사진=문하령 기자)

접전 끝 나란히 승리, 배구·농구 리그 2위로 순항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hu.ac.kr
박재령 기자 kpparr@khu.ac.kr

지난 23일과 24일, 우리학교 배구부와 농구부가 나란히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두며 대학리그 2위에 올랐다. 배구부는 지난 23일 선승관에서 열린 명지대와의 ‘2019 KUSF U-리그 대학배구’에서 세 트스코어 3-2(21-25, 21-25, 25-15, 25-19, 15-12)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농구부는 지난 24일 선승관에서 접전 끝에 건 국대를 82-79, 3점차로 물리쳤다.

배구부는 명지대에 승리함에 따라 리그 2위에 올랐다. 비록 승리했지만 초반부터 쉬운 경기는 아니었다. 1, 2세트를 모두 명지대에 내줬다. 명지대의 양 날개 공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우리학교는 잣은 범실에 계속해서 발목을 잡혔다. 구본승(스포츠지도학 2017)과 김우진(스포츠지도학 2019)이 분전했지만 범실로만 1세트 에 11점을 내줬다. 또한 현재 대학배구리그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명지대 손준영의 공격에 손을 쓸 수 없었다.

하지만 3세트부터 경기 흐름이 달라졌

다. 명지대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학교 김찬호 감독은 포지션 변경을 단행 했다. 또한 세터 신승훈(스포츠지도학 2019)의 투입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에 우리학교 배구부의 주포 알렉스(체육학 2014)의 장기인 블로킹마저 살아나면서 경기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신임생임

에도 에이스로 등극한 김우진은 4세트에 만 9점을 기록하는 고력을 발휘했다. 그리고 마지막 5세트에서 15-12로 명승부의 마침표를 승리로 찍었다. 이날 경기에서 13점을 득점하며 승리에 일조한 구본승은 “앞으로도 선수들과 힘을 합쳐서 많은 경기에서 승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농구부도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다. 42점을 학점한 김준환(스포츠지도학 2017)과 박찬호(스포츠지도학 2016)의 활약이 빛났다.

경기 양상은 우리학교가 리드하면 건국 대가 계속해서 추격하는 양상이었다. 하지만 2쿼터 초반 우리학교 센터 이사성(체육학 2018)의 부상이라는 악재가 찾아왔다. 건국대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역전에 성공했고 접수를 4점 차로 벌렸다. 하

지만 우리학교는 집중력을 잃지 않고 정민혁(스포츠지도학 2017)과 권혁준(스포츠지도학 2016)의 활약으로 2점 리드한 채 2쿼터를 끝냈다.

3쿼터부터 김준환의 활약이 시작됐다. 초반에는 건국대의 3점슛과 스플로 리드를 허용했지만 빠른 속공과 드롭 인정 자유투로 승부를 뒤집었다. 이 과정에서 김준환은 3쿼터에만 10득점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다. 4쿼터에는 박찬호가 부상을 당했고 그 틈을 타 건국대가 다시 역전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용기(스포츠지도학 2017)가 그 공백을 채웠고 이후 투입된 박찬호가 힘을 내며 경기를 82-79 스코어로 승리를 가져왔다.

우리학교 농구부 김현국 감독은 “초반에는 팀플레이가 잘 이뤄지지 않아 고전 했다”며 “이후 빠른 수정으로 승리를 가져온 선수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승리 소감을 밝혔다.

배구부는 오는 31일 선승관에서 조선대를 상대로 3연승에 도전한다. 농구부도 오는 29일 선승관에서 한양대를 상대로 1위를 노려본다.

[서울C] 2019-2학기 교내장학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및 대상

- 가. 신청기간 : 2019.06.10.(월) ~ 2019.07.14.(일) 24:00 [5주간]
- 나. 대상장학: (성적)우수, 우정, 밝은사회, 실기, 계속장학(입시/보훈/북한이탈주민/경희가족/고시 등)
- 다. 신청대상: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전체

2.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융자신청] → 「교내장학금」신청 (* 학자금 조달방법: 장학금선택, *기타선택: 자유내용, *동행장학금: 학생선택사항) ※ 신청 후 장학신청 확인을 조망하여 장학신청이 원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록계좌정보가 없을 경우 신청이 되지 않음 (기본정보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변경 → 개인정보변경 → 개인정보변경)에서 변경 정보 입력 후 신청할 것 - 장학신청서는 온라인에서 작성하여 별도 제출 불필요	
구 분	
서류 제출처 (해당 자료에 한함)	제출서류
교내장학금 신청자 (정문관 1층)	- (성적)우수장학: 아학성적 증빙 등 ※ 단과대학별 별도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속 단과대학에 확인한 후 서류를 제출할 것 - 고시장학(신규): 고시 학과증명서 1부 ※ 서류제출기간: 2019.07.22.(월) 09:00 ~ 07.26.(금) 17:30 - 장애학생(신규): 장애인 등록카드 사본 1부
학생지원센터 (정문관 1층)	- 보훈장학(신규): 대학입학금 및 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보훈처장 발행)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서류제출기간: 2019.07.08.(월) 09:00 ~ 07.14.(금) 17:30 - 기관 보훈 계속장학생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음 ※ 보훈장학(신규): 대상자 어부는 보훈처장(02-944-9217)으로 문의 경희기족장학(신규): 보호자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서류제출기간: 2019.07.22.(월) 09:00 ~ 07.26.(금) 17:30

3. 선발 기본 자격기준

- 가. 2019-2학기 기준 정규학기 재학생
- 나.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

4. 유의사항

- 가. (성적)우수장학은 교내장학 신청자에 한해 선발됨
※ 고시장학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성적)우수장학 수혜불가
나.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해 우정장학을 지원함
※ 2019-2학기 국가장학금(자) 신청기간 : 2019.05.15.(수) 09:00 ~ 06.13.(목) 18:00
- 다. 기존 교내 계속장학생(입시/보훈/북한이탈주민/경희가족/고시 등)도 반드시 교내장학을 신청해야 함
라. 정학규정에 의거하여 정학금은 신청자에 한해 지급되며 소급하여 신청기간은 절대 연장불가함

서울캠퍼스 학생지원센터(장학)

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안내

- 신청대상: 재학생, 재입학자, 복학생
- 1차 학생 신청기간: 2019.05.15.(수) 09:00 ~ 06.13.(목) 18:00
※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가능 (마지막 날은 18시 마감)
- ※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할 것
(단,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3. 서류제출 및 기자원 동의 : - 2019.05.16.(화) 18:00
4.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본인 명의의 개인인증서 필요)
5. 문의 : 한국장학재단 고객 상담센터 1599-2000

2019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 실시 안내

2019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모든 재학생들은 ‘강의평가’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평가 결과는 강의방법 및 강의내용 개선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학생들의 신중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1. 기 간 : 2019.06.03(월) ~ 06.25(화)

2. 대 상 : 서울·국제 캠퍼스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생)

3. 대상강좌 : 학부 및 대학원 전체 개설 강좌

4. 성적 열람 및 공시 기간 : 2019.07.01(월) ~ 07.03(수)

5. 강의평가 실시 여부에 따른 성적조회 기간

- 강의평가 실시 학생 : 2019.06.17(월) ~ 06.28(금), (단, 06.26~06.27 제외)
- ※ 성적입력이 완료된 강좌에 한함

• 강의평가 미실시 학생 : 2019.07.01(월) ~ 07.03(수)

6. 강의평가 실시 방법

- 1)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 수업/성적/상담 → 수업 → 강의평가 클릭
- 2) 강의평가 강좌 목록에서 강의평가를 실시할 강좌를 클릭
- 3) 화면 상단의 답변방법 설명에 따라 설문문항을 모두 답변한 후, 강좌에 대한 개방형 질문(자유의견)을 입력하고, 하단의 [저장] 단추 클릭(저장 후 수정 불가)
- 4) 강좌목록 화면에서 평가를 마친 과목이 [미실시]에서 [실시]로 변경된 것 확인
- 5) 실시한 과목의 평가내용을 다시 보고 싶을 경우에는 강좌를 클릭하여 조회
- 6) 목록에 있는 다른 강좌들도 같은 방법으로 모두 강의평가 실시
- 7) 강의평가 강좌 목록에서 모든 강좌가 [실시]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후 화면 하단의 [로그아웃]을 클릭하여 강의평가 종료
- 8) 강의평가를 잘못 실시한 경우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의 강의평가 담당자에게 문의
- ※ 강의평가는 공정성을 위하여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2019. 05. 22.

교무처 학사지원팀

총장 선출제 구성원 의견 - ②

“목적 부합한다면 어떤 협의체라도 무방”

박영국 총장 직무대행

강석현 기자 nujabes99@knu.ac.kr

#. 구성원 사이에서 빚어진 ‘대평의 규정안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교수의회 강재식 의장은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평의 규정안은 합리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마련된 상식적인 결과”라는 것과 아울러 “범 대위는 법적 효력이 없는 미상의 단체”라는 것을 근거로 대평의 규정안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우리신문은 총장후보선출 제도에 관한 구성원의 시각차를 살펴보려 한다. 지난 신문에서 강재식 교수의장, 한상 경희대학교 노동조합 위원장, 양 캠퍼스 학생 대표자, 손기경 민주노총 경희의료원 지부장의 시각을 담았다. 이번 신문에서는 박영국 총장 직무대행, 총동문회 권오형 회장, 경희학원 통합노동조합 장백기 위원장, 민주총동문회 김재운 회장의 시각을 담았다.

아울러 총장 선출제 이슈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도를 자칭할 때 엄밀하게 따진다면 ‘총장 후보자 추천 제도’가 맞는 표현이나, ‘총장을 뽑는 과정에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당초 논의 취지와 다년간 구성원들이 ‘총장 선출제’라는 표현을 널리 써왔다는 맥락에 비추어 우리신문은 ‘총장 선출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독자들께 알린다.

“총장 선임은 대학과 구성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안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법인 이사회에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를 만들고 실행하는데 있어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3일 서울캠퍼스 본관에서 박영국 총장직무대행(대행)이 ‘대학평의원회(대평)’ 총장선출규정(선출규정) 논란’과 관련해 구성원 합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열었다. 박 대행은 “구성원과의 원활한 소통과 폭넓은 의견 수렴이라는 목적에 부합한다면 그 대상이 어떤 협의체라도 무방하다는 것이 현재 법인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행은 지난 3일 열린 이사회 논의 결과를 들어 법과 규정, 그리고 2018학년도 제4차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구성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법인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과 관련해 법인 이사회가 논의한 바는 있으나 이를 공식적으로 의결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박 대행은 “법인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과 구성원 대표 사이에 교수14: 직원4: 학생4: 동문4의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이 논의되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구성원 대표는 11개 구성원 단체 중 과반인 서명한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 합의서를 법인에 제안했지만, 이사회 당일 해당 부분에 대해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인과 대학본부가 현 구성원 논란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이유는 자칫 정치적 상황으로 번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연구 환경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미 구성원 의견수렴 과정 중 모든 구성원 단체가 대학의 개입 불가를 요청했기 때문”이라며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에 대한 논란은 구성원들 사이에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학본부는 조속한 시일 내 총장후보자 추천규정(추천규정) 초안에 대한 구성원 의견을 취합해 24일까지 법인에 다시 전달할 예정이었다.

앞서 구성원들은 지난 3월 법인이 마련한 추천규정 초안을 두고 “선출규정이 아닌 추천규정을 내놓고 그 안에 여려 독소 조항을 담고 있어 구성원들에게 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박 대행은 “총장 선임 관련 규정 입안은 법과 규정에 근거한 법인의 역할이며, 규정 입안 전 구성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사회 논의 결과에 따

라 구성원 소통이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총장 후보 3인을 이사회 추천하는 제도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총장 선출 제도’가 아닌 ‘총장 후보자 추천 제도’라는 표현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경희학원 정관에 따르면 총장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이사장이 임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총장 선임은 어디까지나 법인 이사회의 고유 권한이며 이러한 권한에 근거해 법인은 총장후보자 추천 기능 일부만 총장후보자위원회(총주위)에 위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장 선임 제도는 국민의 대표로 정치인을 선출하는 선거와 그 본질이 다르다”며 “총주위는 법인 산하 기관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동일한 법과 규정에서 부여된 대평의의 역할 중 총

장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 그럼에도 모든 구성원이 염원하는 훌륭한 총장을 선임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구성원과의 적극적인 소통과정을 거쳐 합리적이고 투명한 총장후보자 추천 과정을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천규정에서 독소 조항 중 하나로 지목된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해 “총장 임용은 법으로 보장된 법인 이사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선거운동과 그에 부수되는 절차가 총장후보자 추천 과정에 당연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공정한 총장후보자 추천 과정을 위해 선거운동 같은 방식보다는 총주위를 중심으로 후보자의 신념과 정책이 공정하게 구성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홍보 활동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총장 선출제를 둘러싼 갈등 국면이 다양화, 다각화되며 항방이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박 대행은 “법인 이사회는 이번 학기 내 새로운 총장 선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현재 추천규정에 대해 구성원 간 입장차가 있으며 조속한 총장 선임을 위해선 모든 구성원 단체가 참여하는 논의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학이 중재나 개입이라는 방식으로 구성원 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평의 선출규정 논란’과 관련해 “지금 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번 문제에 대해서도 양보와 합의, 그리고 이해를 통해 구성원들이 마음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지난해 11월 진행된 ‘총장상 관련 구성원 인식조사’ 결과와 같이, 우리 대학을 이끌어갈 바람직한 총장상을 만들고 그에 부합하는 훌륭한 분을 모셔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총동문회, 기존 투표반영 비율 지지”

총동문회 권오형 회장

강석현 기자 nujabes99@knu.ac.kr

“제5차 대학평의원회(대평의)에서 제기된 동문 대표들의 주장과 ‘대평의 총장선출규정(선출규정)’에 대한 투표는 총동문회 입장과는 전적으로 반대되는 그들의 독단이었다.” 제29대 총동문회장으로 취임한 권오형(경영학 1965) 회장은 지난 24일 우리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총동문회의 속내를 털어놨다.

‘대평의 선출규정’이 투표로 확정됐던 지난 제5차 대평의에서 ‘교수 75%, 직원 10%, 학생 7.5%, 동문 7.5%’의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을 제안하고 이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총동문회를 대표하는 평의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희대학교 노동조합은 “총동문회가 ‘대평의 선출규정’ 투표에 대한 캐스팅보트인 상황 속에서 동문 대표들은 ‘교수 투표반영 비율이 더 높아야 한다’거나 ‘대학은 교수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규탄했다.

총동문회는 범대위 존중한다

총동문회는 지난 7일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에 관한 투표 이후의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밝힌 바 있다. 총동문회는 “교수 투표반영 비율이 타 대학에 비해 현저히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교수의회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은 이미 3년 전 김홍두 의장 시절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총장 선출을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비율을 바꾸자



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라는 대평의 평결 때와는 사뭇 다른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총동문회의 입장은 각 구성단체 임원진의 교체로 상호 이해와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총장선출 범경희대책위원회(범대위)와 법인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임 총장 선출을 원료하는 것”이라며 “각 구성원 단체가 작은 이익에 연연해선 안 되며 범대위가 다시 나서서 총장선출규정에 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총동문회장으로 취임하기 불과 며칠 전 전임 회장이 제5차 대평의에 참여할 동문 대표를 임명하고 떠났다”며 “절

차적 문제 등으로 인해 참석자를 재임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총동문회의 기본 방침은 어디까지나 범대위에서 합의했던 ‘교수14: 직원4: 학생4: 동문4’의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을 지지하는 것이다”며 “앞서 구성원들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평의에서 의견 개진할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 동문 대표들이 독단적으로 높은 교수 투표반영 비율을 지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대위가 다시 나서야 할 때

법인 이사회가 제시한 구성원 의견 수렴 기간인 5월 20일을 훌쩍 넘기고도 ‘대평의

선출규정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두고 권 회장은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에 대한 조율만 거치면 구성원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상황에서 교수의회가 구성원 전체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범대위를 구성해 논의를 꾸려왔던 구성원 단체 대표자들이 임기 등의 문제로 하차하지만 않았더라면 총장 선출은 진작에 이뤄졌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했다.

아울러 “구성원들이 새로운 총장 선출제를 마련하려는 이유는 유능하고 탁월한 총장을 모시기 위함이지, 각자의 이익과 권력을 드높이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맥락에서 교수의회의 행보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운동과 공청회 도입해야

총장 선출제를 두고 권 회장은 선거운동과 공청회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보자가 공약과 비전을 밝히고 구성원들이 질의응답 하는 과정 속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유능한 총장을 선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물며 자식도 부모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법인은 이러한 후보자 공론화 과정을 전혀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등록금 동결로 학교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비즈니스 마인드와 더불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능력을 갖춘 새 총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총장의 역할을 통해 불요불급한 조직을 개편하고 재정 상태를 확대·재생산 구조로 편바꿈해야 학교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장 선출제 취지는 ‘권력 독점’ 해소하자는 것”

경희학원 통합노동조합 장백기 위원장

강석현 기자 nujabes99@khu.ac.kr

“구성원들이 총장 선출제 논의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가 총장 선출제 논의를 처음 시작한 목적은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었으며, 이는 ‘학원의 민주화’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한 구성원들의 투쟁과도 맞물려 있다.”

지난 24일 경희학원 통합노동조합(경희학원노조) 장백기 위원장과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경희학원지부(민주노총 경희학원지부) 박경규 지부장은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구성원들이 당초 선출제 논의를 시작한 취지를 잊고 제도 마련 그 자체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경희학원노조와 민주노총 경희학원지부는 같은 듯 다른 단체다. 90% 이상의 조합원을 함께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경희학원노조는 경희학원에 근무하고 있다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노동조합으로, 민주노총 경희학원지부는 전국대학노동조합의 산별노동조합으로 존재하는 별개의 조직이다.

앞서 경희학원노조와 민주노총 경희학원지부는 기고문을 통해 “대평의를 통한 교수의회의 폭거는 지난 4년 간 대평의 중심으로 이뤄져왔던 총장 선출제 논의와 합의를 전부 부인하는 폭력”이라며 “교수 투표 반영 비율은 반드시 50% 미만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함께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사실 지금 논의하는 안은 ‘총장 선출제’가 아닌 ‘총장 후보자 선출제’이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수의회는 비민주적으로 기준 합의를 뒤집고 모든 구성원의 의사를 무시하여 독재자를 내세우려 한다”며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인터뷰 동안 양 대표는 다소 이견을 보이는 와중에도 성숙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 위원장은 “갈등과 반목은 생길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역행이 아닌, 성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현재 총장 선출제를 바라보는 각 구성원들의 관점이나 지향점에서 많



경희학원 통합노동조합 장백기 위원장(좌)과 민주노총 경희학원지부 박경규 지부장(우)는 지향해야 할 가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일부 구성원들이
당초 선출제 논의를
시작한 취지를 잊고
제도 마련 그 자체에만
집착하고 있다”

은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며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극복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자꾸만 생략되고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박 지부장 또한 “바람직한 총장상에 대한 숙의 과정이 마련될 필요도 있다”며 “형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이르는 과정이나 내용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총장 선출제 마련의 취지가 ‘권력 독점의 해소’라는 목적과 어긋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전에는 교수 가 대학의 총장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도 했지만 이제 교수는 단지 직업인에 불과하다”며 “이미 존중하는 의미에서 구성원들이 크게 양보해 53% 가량의 교수 투표반영 비율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의회가 그보다 높은 비율을 주장하는 것은 선출제를 마련하는 취지에서 한

참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의회 강재식 의장은 “지난 5월 14일, 15일 양일 간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75%의 교수 투표반영 비율과 관련해 ‘대평의에서 논의하고 확정한 비율을 고수해야 한다’ 또는 ‘총장 선거를 성사시키기 위해 비율을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한다’를 선택하는 전자 투표를 실시했다”며 “개표 결과, 기존 대평의 선출규정대로 75%의 교수 투표반영 비율을 고수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지난 20일 열린 제2차 전체 임시대의원회에서 이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었다”는 입장 을 밝힌 바 있다. 해당 조사 결과, 총 응답 대상 1,321명 중 701명이 응답했으며, 이 중 64.9% 가량이 ‘대학평의원회에서 논의하고 확정한 교수 투표반영 비율(75%)을 고수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경희학원지부는 논평을 통해 “똑같은 설문 조사를 학생들

과 직원들에게 실시했다고 가정했을 때 교수 투표반영 비율을 원상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일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학생과 직원들은 더욱 그 결과를 염중하게 받아들여 교수들과 가열차게 대립할 것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학교 교원들 중 아직 양심을 지키고 있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희망을 보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지부장은 자체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교수의회가 밝힌 입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전체 조사 대상자 중 절반 가량이 응답하지 않았으며, 교수 투표반영 비율을 양보해야 한다고 응답한 교수 가 35%에 이른다는 점에서 교수의회가 의도했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논란 속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교수의회가 설문 조사를 통해 교수 전체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 위원장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총장 선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총장 선출제는 모든 구성원, 나아가 경희를 존중하는 시민 사회까지 선거에 참여하는 1인 1표제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국 민경선제와 같은 제도를 갖추어서 경희가 총장 선출의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 달째 구성원들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두고 장 위원장은 법인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이번 논란으로 인해 총장 선출제 논의가 변곡점을 맞이하는 것”이라며 “총장 직무대행 체제의 어려움을 지속할 수 있는 법인이 구성원들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 이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해 기존처럼 총장 을 선임하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법인이 당초 총장 선출제 논의를 시작했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다른 대학의 법인처럼 일부 구성원 갈등을 조장하거나 유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비추며 “구성원들이 반드시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의견 조율 과정을 기다려달라고 법인을 설득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가치…이해 관계 벗어나야”

민주총동문회 김재운 회장

김지원 기자 kju990327@knu.ac.kr

“투표반영 비율은 사실상 구성원 단체 간 이해관계를 푸는 일이며, 정책이나 비전과 같은 가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경희민주총동문회(민주동문회) 김재운 회장은 현재 총장 선출제 논의의 상황을 “간 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사안에 대해선 합의했지만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그중에서도 요즘 가장 부각된 것이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에 관한 문제”라고 정리했다.

김 회장은 현 사태를 두고 “이해관계에 만 깔매여서 더 큰 틀에서의 담론과 가치를 지향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민주동문회가 총장 선출제 논의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이 가치이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숫자보다는 가치가,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가치 중심의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의 투표 방식은 자칫 인기투표로 변질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김 회장은 “가치 중심의 선거를 위해서는 ‘공론화 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후보



이 있으면 속상하지만 학교에 발생하는 일이 동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를 밝혔다. 투표비율에 각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비중, 중요도, 영향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김 회장은 “연구와 강의

을 가질 수 있어 직선제를 채택한 것을 무의미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는 “교수의회 75% 주장은 욕심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직선제 취지를 살리고 민주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교수들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앞서 제시한 두 가지 문제의 식 해결을 위해서는 투표반영 비율은 투표율과 연동하여 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며 수정안을 제시했다. 또 “교수, 학생, 직원은 직선제를, 동문은 간선제로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민주라는 가치에 빛대어 봤을 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동문회는 1인 1표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가치 중심의 논의와 설득, 수용의 과정으로 훌륭한 제도가 완성될 수 있다”며 “자신의 입장은 무조건 관철시키려 하거나 상대 입장은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마찬가지로 “구성원들은 이번 총장 선출제를 통해 무엇을 얻고 어떻게 발전해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지 이해라는 협소한 가치를 두고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총장 선출제를 바라봐야 함을 역설했다.

기획

필요한 정보, 유령 홈페이지에서 찾아야 하나

박재령 기자 kpparr@k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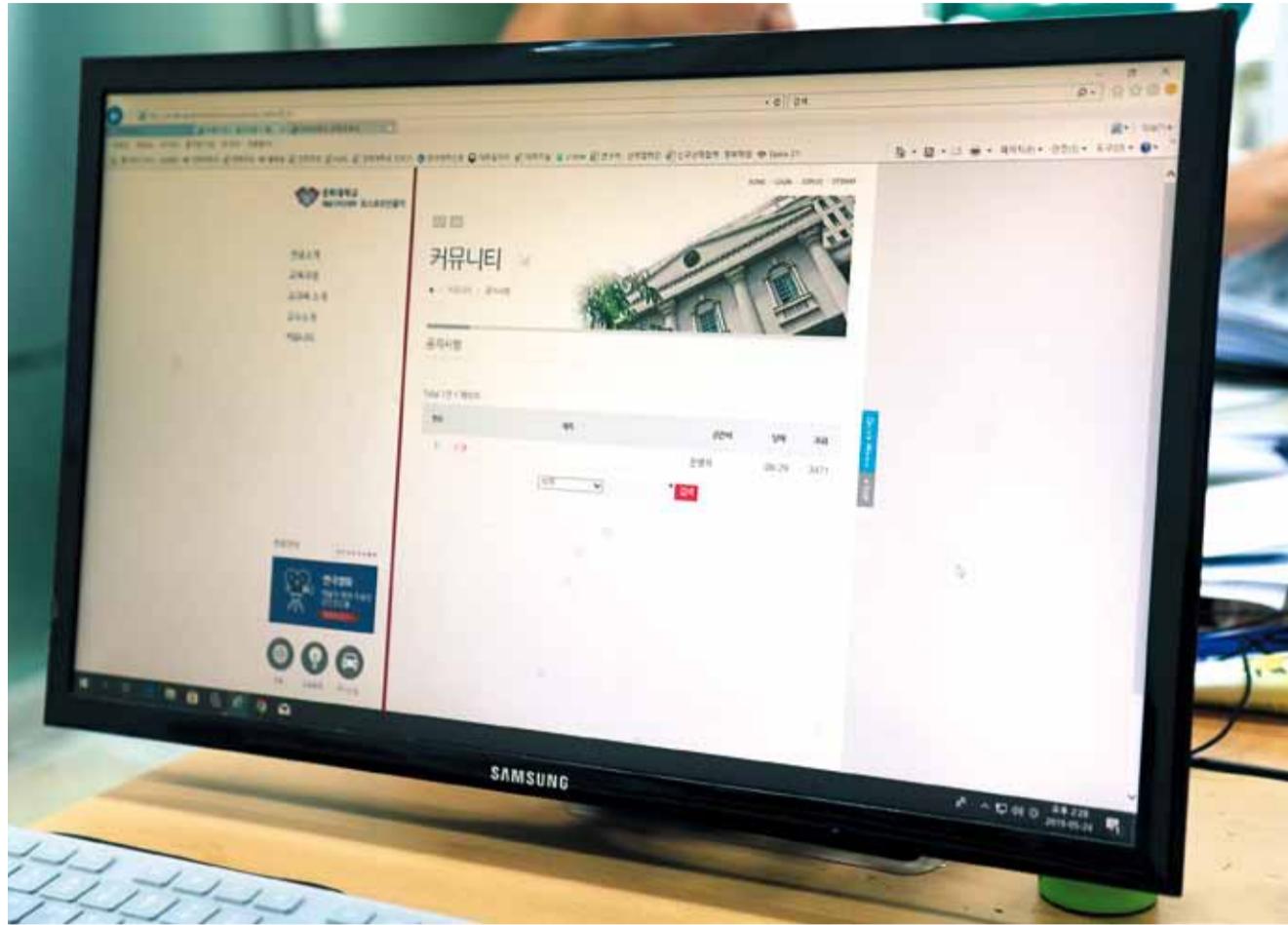
우리학교 홈페이지가 학생의 시선에서 멀어지고 있다. 접근성과 편의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고 유령화 된 홈페이지도 있었다. 통합적인 사이트 관리 기준은 여전히 부재했다.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웹 환경에 대응하려면 보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각 부서의 적극적인 개편 의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학교에는 메인 홈페이지를 비롯해 학과, 대학본부, 부속기관 등 약 200여 개가 넘는 홈페이지가 있다. 홈페이지는 정보와 구성원 간 소통의 장을 제공한다. 또한 외부인에게 처음 보이는 얼굴로 ‘브랜드 형성’의 기능도 한다. 그러나 홈페이지는 접근성, 편의성 부족이나 오작동으로 시간이 갈수록 구성원에게 외면받고 있다.

사용률이 낮은 주된 이유는 다양해진 사용 환경에 대응하지 않아 발생한 불편함이다. 학생의 이용이 가장 많은 종합정보시스템(종정시), KLAS는 브라우저 별 호환성이 완벽하지 않았다. 종정시 일부 기능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한다. 등록금 고지서 조회 및 출석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KLAS 또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최적화되어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업로드가 불안정하다. 각 홈페이지 별로 관리와 개발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브라우저를 쓰게 되면 콘텐츠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등의 오류가 발생한다.

학과 및 단과대 홈페이지 87개 중 26개 홈페이지는 구글 ‘크롬’으로 이용할 때 화면 깨짐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홈페이지가 Adobe사의 플래시로 구현돼 있기 때문이다. 플래시는 렌섬웨어의 공격 통로로 악용되는 등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최근 웹 환경과 브라우저들은 플래시를 제외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플래시로 구현된 사이트가 다수 남아있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통계에 따르면 PC 환경에서 크롬 브라우저의 점유율은 60%를 꾸준히 상회하고 있어 그만큼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 셈이다.

모바일 호환도 미흡했다. 학과 및 단과대 홈페이지 87개 중 25개의 홈페이지가 모바일 호환성이 되지 않았다. PC 버전으로는 작은 글씨와 화면 깨짐 등으로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 이외에도 입학처와 국제교류처, 일부 대학원 홈페이지를 제외한 학내 홈페이지는 모두 모바일 호환성이 되지 않았다.



접근 및 편의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예술·디자인대학 홈페이지의 모습이다.

이지 역시 거의 모바일과 호환되지 않았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유명무실한 상태인 홈페이지도 여럿 발견됐다. 약 20개가 넘는 홈페이지가 최근 1년간 게시물이 없었다. 또 대부분의 홈페이지가 Q&A 게시판이나 회의록 공개 페이지인 Communication21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 접근 경로가 사라져 존재하지만 찾을 수 없는 경우나 엉뚱한 사이트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었다. 국제캠퍼스(국제캠) 심리 상담 센터는 홈페이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속기관이나 학생지원에 소개돼 있지 않았다. 심지어 한의 학연구소 홈페이지는 해외 사행성 사이트로 연결됐다.

홈페이지마다 천차만별인 UI(User Interface) 구성과 질도 문제였다. 비교적 최근 개편돼 깔끔한 학과 홈페이지가 있는 반면 10년 전과 차이가 없는 학과도 있었다. 같은 단과대에서도 디자인과 UI가 각기 달라 통일성이 없는 것이다. 홈페이지마다 다른 UI와 기능은 지저분해 보일 뿐 아니라 이용할 때 혼란을 야기했다. 외부인에게

처음 보이는 브랜드 이미지로서의 역할도 기대하기 힘든 것이다.

이는 통합적인 사이트 관리 기준의 부재 때문이다. 우리학교 홈페이지의 전체적인 디자인과 UI를 결정하는 부서는 커뮤니케이션센터다. 그러나 이는 권고일 뿐 강제성이 없다. 대부분 해당 부서의 자율에 맡기다 보니 운영 주체가 홈페이지마다 다른 것이다. 이는 우리신문에서 한 차례 지적된 바 있다.(하위 사이트·다양한 환경 아래로는 홈페이지 관리 필요해/대학주보 제1555호 5면, 2013.11.18.)

운영 주체가 달라 개편도 각기 다르게 진행된다. 우리학교는 지속적으로 홈페이지 개편을 하고 있다. Info21사업으로 올해 하반기 안에 종정시가 개편될 계획이다. 메인 홈페이지 역시 지난해 새 단장을 마쳤지만 이러한 개편이 다른 홈페이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쌓인 문제점들은 구성원을 홈페이지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했다. 역할을 잊은 홈페이지의 자리는 SNS가 대신하고 있었다. 포스트모던음악학과 행정실 측은 “학생들이 홈페이지를 잘 안보다 보니 직접 카카오톡

을 통해 공지를 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국어국문학과 행정실 측은 “사람이 많이 없는 세부 전공 같은 경우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 홈페이지 수요가 떨어진다”며 “정보는 주로 페이스북으로 제공된다”고 밝혔다. 밤길이 끊기니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논의는 후순위로 밀렸다. 관리 부족으로 인한 수요 하락이 또 다른 관리 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행정실은 개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보를 찾고자 할 때는 홈페이지가 가장 기본적인 매체다. SNS나 KHU알리미 등을 보내주는 것만을 받는 수동적 매체다. 다전공 및 전과 요강 등 본인 학과와 정보를 찾을 때는 홈페이지에 의존한다. 커뮤니티나 SNS를 하지 않는 구성원 혹은 외부인 또한 홈페이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조준상(국제학 2016) 씨는 “다전공이나 부전공 학과 정보를 찾을 때 모바일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적이 있다”며 “글씨가 너무 작고 게시글이 뜨지 않아 이용하기 불편했다”고 전했다.

홈페이지가 유명무실해져도 서버관리비나 서비스 구축비 등 유지비는 계속 들어간다.

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커뮤니케이션센터 측은 “업무량이나 어떤 언어로 개발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다르다”며 “편차가 심한 편이지만 홈페이지가 유지되기 위해 선 일정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사실상 운영되고 있지 않은 예술·디자인대학 학과 홈페이지도 유지·보수비를 연 단위로 지출하고 있다.

접근 및 편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웹 표준이다. 웹 표준은 웹에 하나의 표준을 도입해 어느 환경에서도 똑같이 보이고 작동하게 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웹 표준을 준수한다면 브라우저 별 호환성 문제나 모바일 호환 문제가 해결된다. 지난해 개편된 메인 홈페이지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는 웹 표준 권고를 지키도록 개발된 사례다.

그러나 웹 표준을 모든 홈페이지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전체적인 홈페이지의 운영 주체가 없고 각 단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일괄 개편이 거의 불가능하다.

통합적인 사이트 관리 기준을 세우고 운영 주체를 일원화시켜 UI나 기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세운다면 홈페이지를 정상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관리 규정을 세우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커뮤니케이션센터 측은 “부서별로 예산도 다르고 사정도 다르다”며 “개편을 일괄 진행한다거나 학내 모든 홈페이지를 한 곳에서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각 부서의 적극적인 개편 의지가 필요하다. 지난 2월 개편된 철학과 홈페이지는 문과대학 내에서 유일하게 모바일 호환이 가능한 웹페이지다. 철학과 행정실 측은 “학생이나 교원 쪽에서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만족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커뮤니케이션센터와 공동 개편을 하는 경우에도 각 부서의 개편 의지가 먼저다. 공동 개편이 이루어지면 메인 홈페이지의 검색엔진과 연동되고 디자인 일원화로 통일성이 향상된다. 웹 표준 준수로 호환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규정 상 1,000만 원 이상의 규모를 가진 홈페이지는 커뮤니케이션센터 지원 아래 개편이 진행된다. 그 미만의 규모라면 공동 개편과 자율 개편 중 선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각 부서의 개편 의지다. 규모에 관계없이 해당 부서가 개편을 원하지 않는다면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커뮤니케이션센터 측은 “커뮤니케이션센터 지원 아래 개편이 진행될 수 있지만 강제는 아니다”며 “해당 부서의 요청이 먼저 들어와야 한다”고 밝혔다.

경희대학교 LINC+ 사업단 2019학년도 1학기

학생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일시 및 장소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피스홀서울캠퍼스
청운관 B117호

대상인원 : 100명

2019.5.28.(화) 12:00

2019.5.29.(수)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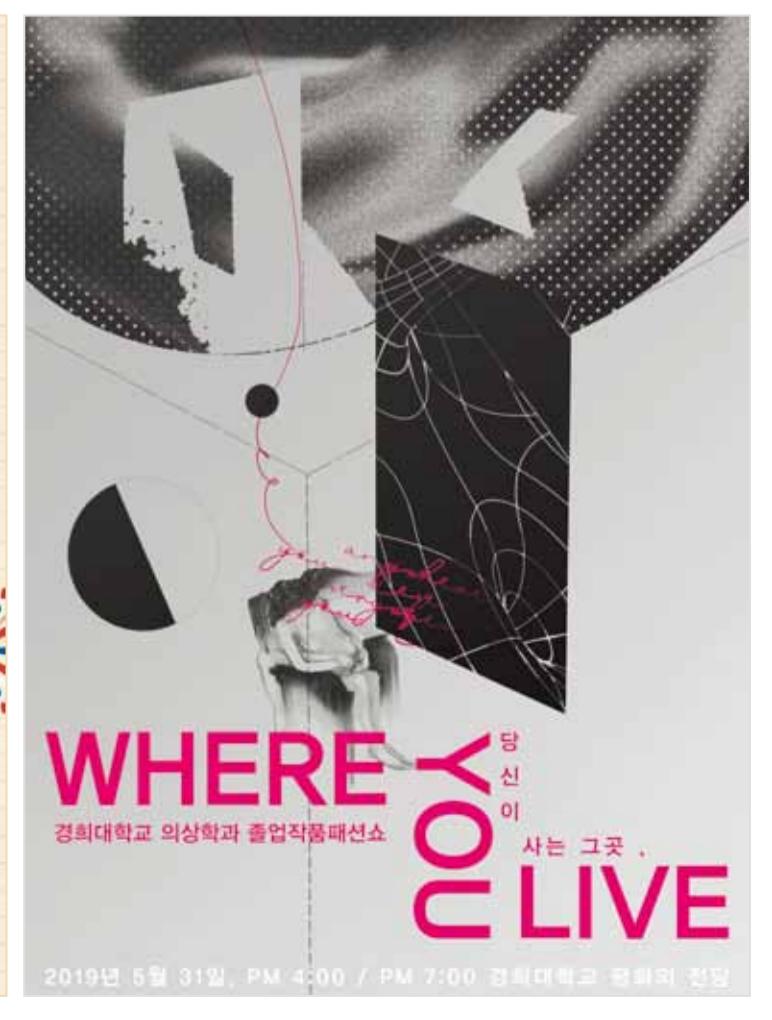
설명회 종료 후 햄버거와 콜라 제공!!
(선착순 서울C 100명, 국제C 100명)

설명회 주요내용

프로그램	소개	신청기간	활동기간
Global AFRO (경희 청년 해외개척단)	해외시장 개척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클레보레이션	2019.5.30.(목)까지	2018.6월 ~ 2019.8월
창업교육 프로그램 (KHU Valley Program)	KVP는 지방적 진로 탐색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이 스스로 진로목표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플랫폼	2019.6월 중순	2019.6월 ~ 2020.1월
수원시 지속가능도시 아이디어경진대회	수원시, 경희대, 아주대, 성균관대 공동개최로 수원시의 도시재생, 사회, 환경, 복지 분야의 문제를 주제로 리빙랩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경진대회	2019.6월 중순	2018.6월 ~ 2019.9월
달링서포터즈 (LINC+사업단 학생기자단)	LINC+사업단의 사업 및 현장실습, 기족회사, 특강 등 취재기획하는 학생기자단	2019.6월 중순	2019.6월 ~ 2019.12월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2019-1학기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이수자 대상 경진대회	2019.6.14.(금)까지	2018.6월 ~ 2019.7월
현장실습 프로그램안내	학생들에게 현장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진출을 위한 지원 협력의 기회를 제공	1차: 5.15~5.21 2차: 6.3~6.7	2019여름학기

참가자격 및 대상

- 2019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프로그램 참여(예정) 학생
- 2019학년도 1학기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참여 학생
-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심 있는 학생
-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참여/관심 학생
- 특별한 도전을 원하는 학생
- 산학협력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학생



2019년 5월 31일, PM 4:00 / PM 7:00 경희대학교 광화문 전광

뉴스레터, 독자적인 정보제공 채널로 발돋움 목표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nu.ac.kr

올해 대학주보는 창간 64주년을 맞이한다. 1955년 창간한 대학주보는 64년 동안 쉼 없이 학내 구성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대학주보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연례 구성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이메일로 진행된 '구성원 미디어 소비 및 뉴스레터 인식' 설문조사를 통해 구성원의 미디어 소비 경향을 파악한 뒤 최근 떠오르는 기사 유통 방식인 뉴스레터로의 변화를 꾀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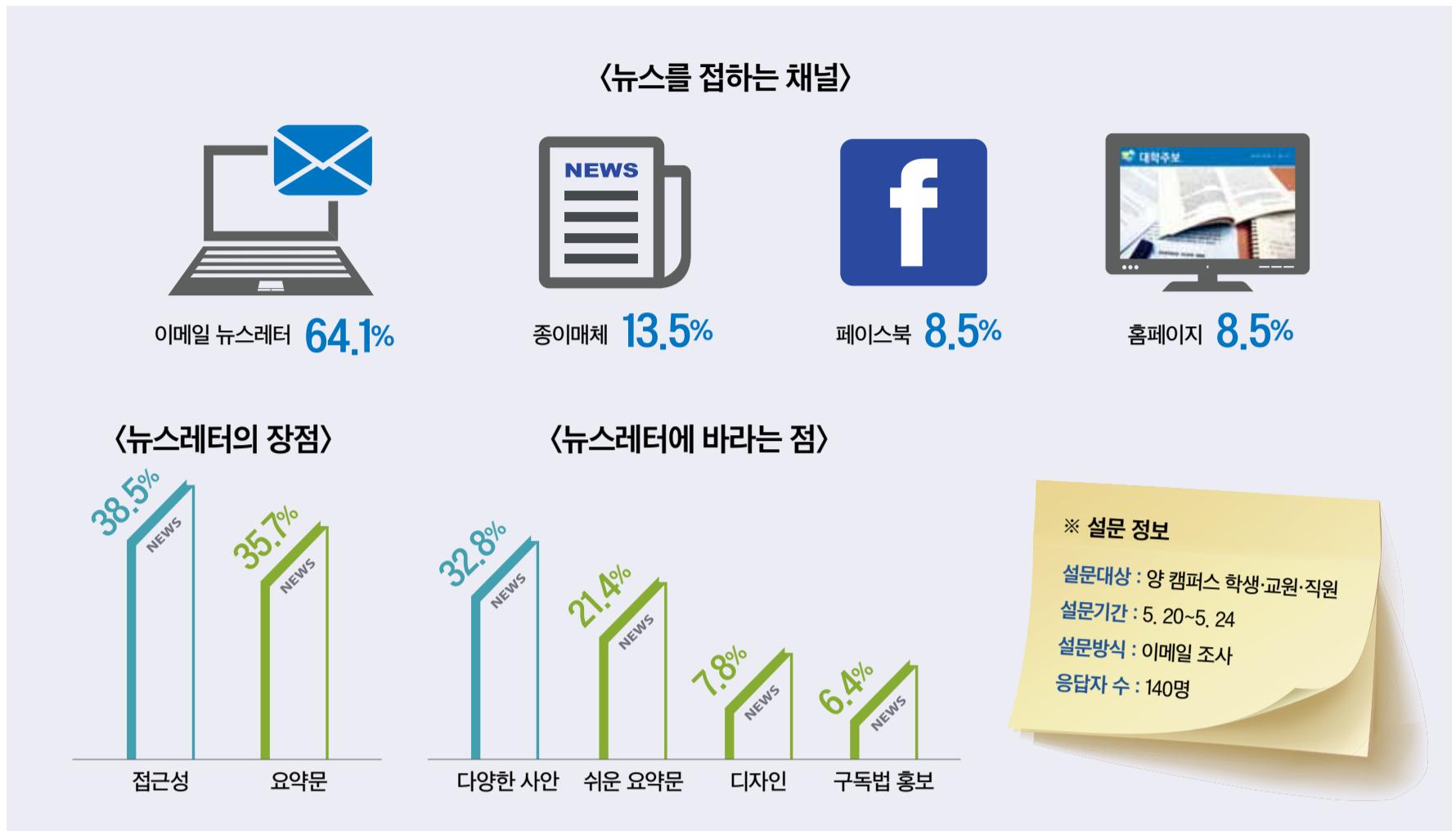
대학주보는 항상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았다. 대학 언론 최초로 한글쓰기, 가로쓰기, 컬러지면과 베를리너 판형을 도입했다. 최근 들어선 기사를 접하는 방법이 지면에서 온라인으로 변해감에 따라 디지털 퍼스트를 제창하며 성질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매주 발행하던 종이신문을 격주 발행으로 변경하고 대학 언론 최초로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현재까지 가장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중이다. 변해가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언제나 혁신을 외치던 대학주보는 이제 또 다른 변화를 시도하려 한다.

5일간 양 캠퍼스 교수,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는 총 140명이 응답했다. 크게 학내 뉴스를 접하는 방법·매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와 대학주보가 보내는 이메일 뉴스레터에 대한 인식 질문이 주를 이뤘다.

많은 수의 응답자는 학내 뉴스를 접할 때 스마트폰, 태블릿 PC와 같은 이동형 단말기를 사용했다. 140명 중 65명이 선택했다. 한편 신문과 같은 종이매체를 사용한다는 응답자는 140명 중 19명으로 나타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감소 추세를 보였다. 감소세이지만 아직까지 종이매체를 통해 학내 뉴스를 접하는 구성원이 있다는 것은 대학주보가 지면 발행을 멈추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학주보 기사를 주로 접하는 채널은 지난해 진행됐던 창간 63주년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메일 뉴스레터로 나타났다. 종이신문, 대학주보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가 있지만 140명 중 94명, 응답자의 64.1%가 이메일 뉴스레터를 선택했다. 이 지점이 대학주보가 시도하려는 하나의 변화다.

뉴스레터란 언론사가 독자에게 기사와 관련한 소식지를 만들어 이메일로 보내는



서비스다. 뉴스레터에는 다양한 모델이 존재하지만 현재 대학주보는 홈페이지 방문 증가를 도모하고 미래 독자에게 도달하기 위해 뉴스레터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주보 뉴스레터는 주 3일 발송을 원칙으로 그 주의 중요한 뉴스를 이미지와 요약문 형식으로 정리해 전달하고 있다. 학내 구성원뿐 아니라 대학주보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신청해 받아볼 수도 있다.

뉴스레터라는 채널은 새로운 채널이 아님에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재평가 받고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언론사는 매체홍보와 기사 유통에 SNS를 활용했다. 흔히 들어본 기성 언론도 그랬고 대학주보도 그랬다. 하지만 자체 채널이 아닌 외부 채널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 SNS의 유행과 영향력에 따라 유통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실제로 한때 가장 활발한 SNS였던 페이스북의 위상 변화를 통해 위험은 현실화되고 있다.

SNS 채널에도 분명한 장점은 존재한다. 다수의 방문 유도에 유리하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언론사 입장에서 궁극적으로 뉴스

레터는 열독자에게 직접 기사를 전달할 수 있는 자체적인 유통망으로 기능한다. 독자 입장에서는 관심사와 유사한 기사만 선별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이점이 생긴다. 현재 대학주보가 뉴스레터를 보내는 것도 그 일환이다.

대학주보 뉴스레터에 대한 구성원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만족 및 만족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40명 중 79명이었다. 그 중 140명 중 54명이 '접근성'을 장점으로 꼽았다. 50명은 '알기 쉽게 정리된 요약문'을 장점이라고 답해 뒤를 이었다. 뉴스레터의 고유한 장점을 구성원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독자적인 채널로 발돋움할 수 있는 만큼 뉴스레터가 담고 있는 콘텐츠도 무시할 수 없다. '대학주보 뉴스레터가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나?'는 물음에 매우 그렇다 및 그렇다고 응답한 구성원은 140명 중 85명이었다. 반대로 뉴스레터에서 필요한 정보를 구하지 못했다는 의견에는 '관심 없는 사안', '불충분한 구성', '오피니언 콘텐

츠의 부재' 등이 이유로 꼽혔다.

이는 대학주보 뉴스레터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낸다. 천편일률적인 내용 구성과 디자인 그리고 기능이다. 디자인이라는 점을 둘째친다 해도 내용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양일보는 현재 20종류 이상의 뉴스레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그 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대학주보 뉴스레터를 이용하는 구성원은 설문조사 응답을 통해 이 지점을 꼬집었다. 대학주보 뉴스레터에 바라는 점으로 '보다 다양한 사안'을 고른 응답자가 46명으로 제일 많았다.

또한 현행 대학주보 뉴스레터는 홈페이지 방문자 유도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한계도 안고 있다. 대학주보 뉴스레터를 개봉해 보면 등장하는 한 줄의 제목과 2~3줄의 요약문은 클릭을 통한 홈페이지 방문 유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 점도 설문을 통해 지적받았다.

독자를 홈페이지로 끌어들이는 것에만 집착하지 않고 뉴스레터 자체를 독립된 정보제공 채널로 간주하며, 가급적 충분한 양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Global AFRO!

경희 청년 해외개척단

2019.5.30.(목)까지 참여학생 모집

사업개요

- Global AFRO(글로벌 앞으로):
- Global sales and mArketing FRontier Organization
- 해외시장 개척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간 1대1 매칭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19.5.30.(목)까지
- 신청방법: 사업단 홈페이지 '온라인신청'에서 신청 (http://aladdin.knu.ac.kr/linc8/apply_online_list.do)
- 문의: 031) 201-3922 담당자 원재연 linc01@knu.ac.kr

모집대상 및 규모

- 경희대학교 LINC+ 사업 참여학사단위의 재(高)학생 약 40명 (총 10개 단 내외)
- 글로벌 시장개척 및 창업에 관심있는 재(高)학생

지원 자격

- 팀원은 2~3명 내외로 신청하며 팀 단위로 신청
- 공지된 기업의 해외진출 취임 컨텐츠 및 역할을 보고 1~3차량으로 신청
- 제출한 계획서를 평가하여 팀 단위로 기업 매칭 (1~3차량으로 평정 가능)

우대사항

- 글로벌 디자인, 현장실습 교육을 통해 수행한 프로젝트와의 연관성 우대
- 기업 해외시장 진출 프로젝트 경험자 우대
- 해당 국가 외국인 학생 또는 해당 국가의 언어 구사 가능 학생 포함 우대

참가혜택

- 해외시장 개척 전문 과정 교육비 지원
- 해외개척단 선발팀 천한 국외활동비(2차 사업) 100만원~200만원(1인당) 내외 지원
※ 상사결과, 파견여부, 파견기간에 따른 차등지원
- 영어중·현장실습 학점 부여(폐기기준과 논의 후 가능자에 한함)
- 결과발표 성적에 따라 최우수상, 우수상 상장 및 상금 지급

주요활동

- 해외 기업분석 및 시장현황 조사
 - 제품, 경쟁사, 소비자 등 기업 현황 분석
 - 기업의 대내·외 경영환경 분석 등
- 국내·외 매출, 시장침투율 향상 위한 팀 단위 Action Plan 수립
 - 1~3차량마다 개별 활동 목표 설정
 - 혁신별 세부화된 역할 분담 통한 업무 효율성 도모
 - 해외시장 침체고객 및 시장분석 통한 활동 전략 수립
 - 해외시장 현지조사 통한 제품 만족도 및 시장 선호 조사, 벤치마킹 요소 도출
- 기업 및 제품의 해외시장 현지화 전략 (디자인,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고려)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신청 공고

『교원자격검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무시험검정서류를 접수하고 심사한 후 교원자격증을 아래와 같이 발급하고자 하오니 신청바랍니다.

1. 대상자

- 교원자격수료증자로 '2018학년도 수기 출입예정자(2019.08.출입)'.

2.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9.05.27.(월) ~ 06.05.(수)
- 접수처: 서울캠퍼스 교직팀 (본관 1층 113호)
- 국제캠퍼스 교직팀 (충암도서관 1층)

3.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소정양식) 1부
 - [+ 교직과목 복수전공자는 무시험검정원서를 접수별로 각각 제출]
- 보조서류(같은 부지별검정원서는 간호사면서증 사본 제출)
- 영어교사(국) 교직팀 (충암도서관 1층)

4. 유의사항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미제출한 경우 교직과장을 이수하지더라도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음
- 재학 중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교직팀으로 문의 바람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고 무시험검정 및 교내 출입시기에 합격으로 학생에 대하여인 교직과장을 이수하고자

5. 문의처

- (서울) 교직팀 02-961-9600, teacher@knu.ac.kr
- (국제) 교직팀 031-201-3049, teacher02@knu.ac.kr

2019. 5. 15.

교무처 교직팀

